

권두 인터뷰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특집
2023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민중화해

121 vol
2023.3+4



민중화해

민중화해 2023년 03+04월호(격월간, 통권 121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3년 3월 13일 발행인 이종걸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전영선, 정구연,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21 vol 2023. 3+4



Cover Story

민화협은 지난 2월 27일 제25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 등으로 쉽지 않은 지금이지만 늘 그렇듯 민화협은 국민과 함께 밝은 통일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새로운 통일 설계도가 기대된다

04
포토에세이 | 조천현
 그리움의 시간

06
권두 인터뷰 | 편집부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굳건한 안보 태세, 평화 위한 남북대화 노력 함께 해야

12
특집 - 2023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
 1.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방향 | 신진우
 2. 새로운 통일미래구상,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 박종철
 3. 정전 70주년, 정전을 종전으로 종전을 평화로 | 이예정

24
기자의 눈 | 서재준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한일관계의 미래

28
이슈앤포커스 | 윤성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장기전이나 단기전이나?

32
우리의 역사 | 반병률
 지행합일의 지성인이자 항일혁명가 계봉우

34
청년칼럼
 ① 패션을 통한 통일 | 김승현
 ② 북한, 우리도 잘 안다 | 유재영

38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이현희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42
민중화해 네트워크
 ① 민화협 제25차 정기 대의원회 | 김태우
 ② <조선의 훈, 아리랑의 귀향> 그 후 5년 그리고 지금 | 이은뜸
 ③ 민화협 정책위원회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발간
 ④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공모
 ⑤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기자회견

50
새로운 시선 ⑦
 김정은 시대 국제보호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 김명신

54
문화모니터
 문학속 통일미래 ⑥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④ | 이상현
 영화 속 북한 이야기 ② | 전영선

64
평화를 만나는 기행 ⑦ | 이영동
 경기도 파주 평화기행 첫번째 이야기

68
궁금한 책

72
민화협 사서함



새로운 통일 설계도가 기대된다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 ·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판잣집이면 모를까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는 필수다. 그것도 남북이 같이 살기 위해 새집을 짓는 통일 설계도라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설계도는 건축기술 발전에 따라, 또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건축기술이 바뀌는 요즘, 30년 전에 그린 설계도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과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문지마 북진통일’은 설계도 없는 통일이었다. 1970년대 월남전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높아지자 ‘승공통일’ 구호가 널리 퍼진 한편으로 평화체제 요구가 강하게 일었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은 분단 고착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9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안됐고, 이는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확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과정을 그린 최초의 통일설계도이다. 이는 1단계 남북 화해협력단계에서, 경제와 사회가 통합하는 2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외교·국방까지 통일하는 최종 통일국가를 이루는 3단계 통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구조다.

바로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년 만에 수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통일방안 변경은 단순히 통

일방법론의 수정이 아닌, 통일운동사에 기록될 큰 사안이다. 통일방안은 단순히 이론상 방안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통일방안을 지지하느냐는 국민통합과 분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법적 기능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국정치학회에서 제안한 초안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가 용역을 의뢰한 측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는 민족의식의 변화에 따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민족 1국가 1체제’가 최적의 모델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독자적 체제를 유지하는 ‘1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형 단일국가’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정치학회가 제안한 통일방안이 연방제에 근접한 것이라면 남북의 통일방안이 거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는 6·15선언의 의미보다 크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선언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우리 통일운동사에서 6·15선언을 귀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남북이 바로 이 통일설계도에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한국정치학회가 제안한 연방형 단일국가안은 남북의 통일설계도가 거의 같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운동사에서 대단한 진전이고 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윗집과 아랫집이 같이 사는 큰집을 짓는 데 서로 설계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집을 짓는 합의가 쉽다는 것이다. 새집을 짓기로 하는 합의가 어렵지 일단 합의만 하면 진행은 쉽다. 사소한 차이는 같이 집을 지어가면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곧 국가보안법에 저촉으로 여겼다. 그래서 통일학 연구자조차 연방제를 언급하기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이 몸을 사릴 정도였다면 일반 통일운동가나 시민단체, 정당은 말할 것도 없이 위축됐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치학회의 이번 제안과 통일부의 수용은 담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견해에 공감한다.

실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역사를 가지고, 극심한 내전까지 치른 양측이 연합단계를 거쳐 단일국가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통

일 이전까지 미국처럼 연방국가 체제가 잠정 혹은 상당 기간 필요할 수 있다. 이민족으로 오랜 역사적 갈등을 빚어 온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실향민들에게는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며 형제와 친척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현실의 통일이다. 보통의 남북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교류만 이뤄진다면 그것이 실질적 통일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지내다 남북 국민이 합의하면 정치, 외교, 국방까지 통합하는 완전 통일체제로 가면 될 것이다.

물론 통일부의 용역보고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 통일정책, 통일방안 대변혁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체계화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가 뒤따를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통일의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비록 우리 세대는 설계도를 그리는 것에 그칠지라도 후대가 제대로 된 통일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정교하고 실제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

32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그리움의 시간

— 오늘도 흐릅니다.
 강이 흐르고
 바람이 흐르고
 뗏목이 흐릅니다.
 뭍은 머물러 있지만
 시간은 굵이굵이 흐릅니다.
 지금은 모든 걸
 가슴에 담은 시간입니다.
 그리움의 시간입니다.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이 성 현 서대문구청장

굳건한 안보 태세, 평화 위한 남북대화 노력 함께 해야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 (제16대·18대 서대문구갑) 출신 정치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에 입문한 뒤 청와대 정부 비서관 등을 지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이력을 더 추가해야 한다.

대담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정리 황지은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화협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민간통일운동에 힘을 보탠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성현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은 남북 교류협력과 남남대화 등에 힘을 쏟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민화협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이제는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그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정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2월 23일 서대문구청에서 이성현 구청장을 만나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계획과 함께 여전히 쉽지 않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물어보았다.

Q | 2022년 7월 1일 서대문구의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바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주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청장직을 수행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취임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해를 넘겨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려 하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은 주

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둥을 세우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1호 시범 사업지로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수변카페가 조성되어 올해 3월 중 가오픈 예정이며, 8년간 막혀있던 연세로도 차 없는 거리 해제 이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올해 1월 20일부터 일반 차량 통행 허용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또한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올해는 개발 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고, 보호종료아동과 영 케어러 등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까지 주민의 삶 전반을 돌보는 ‘인생케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Q |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별 특화개발과 소상공인 집중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임기 동안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민들이 저를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낙후된 서대문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도심과 연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서북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리 서대문구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대문의 핵심 상권이 될 수 있는 홍제 일대, 그 중에서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지역이 가장 중요한 상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민선 8기 취임식도 인왕시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서대문구는 5개의 산, 2개의 하천, 그리고 9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입니다. 이에 주민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지하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전철 정거장 이전 및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입니다. 서대문은 서울 도심에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가장 불편한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은 아직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아 마을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성현 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신촌 연세로 차량 통행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사회적 약자 위한 따뜻한 서대문구

Q | 취임 후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설보호아동 자립체험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지금까지의 성과 및 평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설보호아동 자립체험주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내의 아동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를 앞둔 아동들이 퇴소 후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50만 원의 지원금과 주거 공간 5곳(원룸형 2호, 투룸형 3호)을 제공하여 스스로 생활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커뮤니티 매니저와 구청 및 시설 담당자

습니다. 작년에는 자립체험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개월까지 체험기간을 연장하여 시설보호아동이 더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Q | 서대문구만의 자량, 경쟁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체육활동이 구민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복지 분야의 한 분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 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서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여자실업농구단을 창단해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꿈나무 운동선수들과 스포츠 동호회 및 지역 생활 체육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체육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이자 상징이신 박찬숙 감독님께서 서대문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침체된 여자농구의 인기를 되살리고 후배 양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자실업농구단 창단 이외에도 생활체육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 전용 경기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대운동장 개방

협약을 맺어 서대문구 축구 동호인들이 정규 규모의 축구장을 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10시에 마음 편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다수의 학교와 운동장 개방을 위한 협의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 경기장을 9홀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볼링, 배드민턴,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기장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 경기장이나 장애인 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평화와 공존 위한 남북 대화 포기할 수 없어

Q | 지난 시기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민간 통일운동에 함께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도 과거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대화 제의에 대해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전히 남한이 아닌 미국을 대화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유

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를 해야 합의를 하든, 상호 간 이견을 확인하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화 채널을 만드는 작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남북이 공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제로 민족 공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핵 문제의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힘겨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안보태세를 확충하는 것. 얼핏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안보를 확충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북한 측에 부담이 덜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 교류협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화협의 경우 그간 쌓아온 신뢰도 있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채널을 잘 살려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해보면 지금과 같은 강 대 강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위기를 풀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바

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 민화협 활동에 참여하신 계기와 향후 민화협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부터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우연치 않게 민화협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뜻으로 상임집행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민화협은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시기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민화협과 민간통일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현안 문제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젊은 세대들이 통일문제에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힘을 쏟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민화협이 그런 사업을 기획한다면 저 또한 참여해서 돕고 싶습니다.”

Q | 미래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이 정착 입시, 취업 등 개인적 생존문제가 쉽지 않아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연대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9개의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 서대문’은 청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경의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관내 9개 대학과 인근 홍익대, 서강대를 연결하는 신(新) 대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산학연구단지, 바이오연구단지, 스타트업 을 위한 창업플랫폼은 물론이고 공연장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을 가득 채워 청년들이 봄비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연계할 것이며, 취·창업과 관련된 각종 컨설팅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 청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 공간인 청년복합공간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터디룸, 코워킹 오피스, 개인 학습 공간, 그리고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나 개인에 따라서 능력 차이나 태생적인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고민이 있겠지만 자기 삶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길을 저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방향

신진우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방향으로 내세운 핵심은 ‘올바른 남북관계’다. 윤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근거 없는 비판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 여기엔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해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라면서 “대북제재 이행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의 독자재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의 문은 항상 열어 놓겠다던 입장이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면서 남북대화에 응할 경우, 언제든지 경제협력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했다. 정부는 연내 ‘신(新)통일미래구상’도 발표한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구상으로, 선도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관련 정부의 방향성 등이 이 구상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등 7대 과제 제시

윤 대통령은 앞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 전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정치사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은 통일부가 1월 업무보고 때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역시 7가지로 분류된 핵심 추진 과제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내세운 통일부는 7대 과제로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는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과제다. 담대한 구상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담대한 계획’을 예고한 뒤 98일 만으로, 그보다 구체화한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초기 협상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올해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군사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며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로드맵인 만큼 이를 본격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란 의미다.

정부는 일단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한

도발 억제'를 이 구상 실현의 대전제로 제시했다.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담대한 구상의 전제란 의미다.

대신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즉각 이 구상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세부 이행 계획을 준비해 둘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경제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안전 보장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까지 미리 마련해두겠다는 것. 지난해 담대한 구상 발표 당시 이러한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은 빠져 있었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직·간접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물론, 국군포로 문제 등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대화의 틀을 '신뢰'를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리 대화를 해서 합의해도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신뢰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개성공단 등도 쫓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관련해선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에 정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설립돼야 했던 북한인권재단

은 올해로 7년째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재단의 역할부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통일부는 재단 출범 전까지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으로만 40억 원가량 투입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도 발간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2월 '북한인권 토론회' 참석 당시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新)통일미래구상’ 마련 위해

상반기 각계 의견 수렴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의 핵심은 '신통일미래구상' 수립에 있다. 통일부는 2월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통일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신통일미래구상은 '담대한 구상'은 물론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과도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겠다는 의미다.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는 그동안 진행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과제로 알려졌다. 정부는 탈북민의 재교육·재출발 지원부터 아예 수요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산하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 교육 과정은 실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탈북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에도 나선

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에 난립했던 각종 통일문화행사 등은 통합 개최해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 적립 근거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당국자는 "국가재정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1조 원 넘게 잡아와도 대부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北 연세 도발, 코로나19 장기화 등은 정부에 부담

통일부는 1월 업무보고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 이른바 '3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담대한 구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서고자 하는 정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올해는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을 쏘 올리며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대화에 나설 의사 자체를 내비치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나름의 대북 구상을 적용할 기회조차 만들기 쉽지 않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서도 날선 비판만 쏟아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이 구상을 내놓은 지 며칠 뒤 김 위원장의 여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에는 부담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도 얻을 게 있어야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로 꽉 막혀 있는 지금 상황에선 북한 내부적으로 우리와 접촉하겠단 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론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러한 북한의 봉쇄 조치가 수년 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중 관계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도 남북관계에 악조건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미중 신냉전 구도 가속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정부는 내부 정비부터 우선 나서는 모양새다.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에 맞게 통일부 내 일부 조직 등을 상반기 중 집중 개편·재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주축이 된 일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직 등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내부 조직을 '올바른 남북관계'란 국정 철학 등에 맞춰 다지는 작업을 해둘 것"이라고 전했다. 🌈

신진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학사) 및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2 2023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



새로운 통일미래구상,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박종철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2022년 9월 19일 개최된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1월초 업무보고에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통해 한반도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을 마련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통일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일미래정책의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 남북동시가입을 제안한 6·23선언(1973)이나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해 남북교류협력의 이끈 7·7선언(1988)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국력을 반영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까지 염두에 두는 평화통일의 미래비전을 만들려는 것이 신통일미래구상의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우리는 주요 10개국 반열에 올랐으며 남북 역학관계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에 의하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은 골격만 있는, 추상적으로 이정표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신통일미래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구상과 통일방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통일구상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지침, 전략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목표와 가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철학적 기초와 거시적 접근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구상과 통일방안의 구분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통일문제는 국제정세 및 남북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두 영역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담론을 재구성하고 정책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통일담론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점도 있다.

달라진 국제환경과 남북관계 지형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통일구상과 통일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탈냉전 후 30년이 지나면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지형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질서의 게임 체인저이다. 북한은 핵·미사일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남북 간 국력을 역전시키고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등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었다.

북한이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이다. 김정은 체제는 권력구조의 안정화, 국가의 시장통제, 사회통제, 조직적 반대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안정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화의 확대,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개인주의 및 배금주의 사조, 경제적 어려움 등 균열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급작스러운 북한붕괴론은 설득력이 없지만 북한의 균열요인

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북한을 상대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며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두 번째 고려요인은 신냉전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의 세계적 변화에 힘입어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했다. 이것은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주도적 노력, 북한의 선택적 호응이 어울려서 빚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신냉전의 새로운 추세는 한반도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중전략경쟁은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 군사적 대립,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전략경쟁은 가치대립과 진영대립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냉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대결을 하고 있다. 또한 미중경쟁은 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전쟁은 세계질서의 진영 간 대립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냉전 추세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질서, 한반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슈에서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는 대신 자력갱생과 국방력강화를 내세우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열중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에 냉전적 대립이 재현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북한의 핵위협과 불안정성, 신냉전 추세라는 국면전환요인을 고려하면 통일의 징검다리를 놓아야 할 신통일미래구상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첫째, 통일담론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분단관리와 평화정착이 중요하지만 평화공존을 넘어 통일이 목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과 목표가 희미한 통일담론은 목적지를 상실하고 표류하는 항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탈냉전시대를 풍미한 기능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교류협력이 공존을 두텁게 하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립 해소와 정치적 화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도 기능주의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군사대립이 첨예화된 한반도에서 기능주의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화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의 변화와 남북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압박과 관여를 복합적으로 배합하는 전략적 복합성이 필요하다.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선택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련된 정책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등 인도문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국제협력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냉전의 불확실성과 국가이기주의가 득세하는 국제환경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세계 10위권 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과 문화적 위상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의 당위성과 주도권에 대한 입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협력적 동반자, 파트너, 중추국가 등과 함께 다층적 협력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적 통일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통일미래교육 확대, 통합대비 계획 마련, 법제도정비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는 통일방안 보완해야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방안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지만, 30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을 확장하여 통일미래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21세기에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 복지, 인권, 행복추구권 등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을 추진한다는 가치실현의 당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분단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과 이를 통일프로세스와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민족담론을 ‘열린’ 민족담론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는 통일의 동력이자 이상이었다. 그러나 탈민족주의의 흐름으로 민족의 흡인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추세,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경향, 글로벌화 등을 고

려하여 민족담론을 열린 민족주의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민족의 혈연적 문화적 결합성을 강조하는 대신 보편적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적 통일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진적 통일프로세스를 유지하되 3단계를 기계적으로 고수하기보다 남북연합의 운영방안, 통일국가형태의 다양성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동체형성의 기초를 유지하되 공동체의 다양화, 공동체간 우선순위의 신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사회문화, 정치 분야의 순차적인 공동체형성에 집착하기보다 동시적이고 병렬적으로 공동체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평화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평화공동체형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추진절차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일추진과정에서 남북 간 협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신통일미래구상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가장 큰 교훈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새로운 통일구상 및 통일방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진보, 보수로 나누어진 남남갈등의 벽을 넘어서 국민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

박종철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3 2023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



정전 70주년, 정전을 종전으로 종전을 평화로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2023년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어느 해이건 첫 한두 달은 눈 깜짝할 새 지난다지만, 정전 70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올 해는 특히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상황은 여러모로 암울하다. 유럽 끝자락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덮친 끔찍한 지진은 5만 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동북아에서는 무력시위가 또 다른 무력시위로 이어지며 연초부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조금 있으면 잦아들겠지...’ 했을 것이다. 군사적 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작년 우크라이나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정말 전쟁이 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일 뿐, 이 땅에서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2년 전의 나는 그렇게 확신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 해,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며 우리가 밟 딛은 이 땅은 충분히 안전하지, 충분히 평화로운지 되묻게 된다.

예전 한 회의에 참석한 외국 발제자는 “평화는 분명 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호주 출신의 캄보디아인도 기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데, 당사자인 남북이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 당국 간 관계는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악화일로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민간이라도 움직일 여

지가 있으면 좋으려만,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는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손발을 푹푹 묶어버렸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평화는 모두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지난 1월 27일, 통일부는 3대 기본방향과 7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그 구체적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수립,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통일미래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다가올 통일의 상을 그리고 그 과정을 충실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어느 때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미래는 수많은 현재가 모여 이뤄진다. 남북 공히 번영을 누리는,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반기는 사람도 있고, 일방에 기대는 외교가 결국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한미동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역내 긴장을 높이는 군사동맹 중심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과 외교 채널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2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최한 한미 시민단체 간담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인도 지원과 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만난 한반도 전문가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미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한 마디로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보면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말도 시간이 흐르며 그 함의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어떤 의제든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북이 ‘조건을 붙인다면 대화는 어렵다’라고 읽힌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안이 많은 역량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미국의 인식은 문제 해결에 있어 결

정적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이슈를 다시금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전 70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민간도 흠어진 역량을 모아 정전 70년을 평화 원년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 3년간 맹위를 떨쳤던 코로나가 드디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황이 호전되며 중국으로의 여행도 용이해지는 추세다. 북한은 작년 신의주-단동 간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고, 올 2월 초에는 훈춘-나진 육로를 열어 조심스럽게 국경을 재개방하고 있다.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국 입국이 자유로워지면,

민간의 북측 카운터 파트들도 중국 사무소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랜 기간 단절됐던 민간의 대북채널도 재가동될 것이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인도지원, 교류협력사업도 다시금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과거 민간의 대북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은 남북 주민 간 직접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당국 간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남북 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민간은 코로나와 대북제재 환경이라는 현실 뒤에서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민간의 역량은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발휘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물론 민간의 독립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간의 영향력은 분명 사회와 정부의 지지에 비례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혔듯 정부가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민간의 역할은 다시금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어려울 때는 민간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무력 시위에 둔감해졌다고는 해도,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아무도 지금과 같은 긴장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일 것이다. 더불어 사람들은 더 넓어진 민간의 활동 반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정부에게도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리란 걸 경험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렇듯 민간과 정부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14일, 735개의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행동’은 올 일 년 동안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명운동, 국제회의, 문화제, 지역차원의 다양한 평화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범대회에는 평화행동의 주요 참여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 세대들도 함께했다. 그 중 청소년 대표로 참여했던 한 중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어릴 적 읽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형제 중 막내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튼튼한 벽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늑대도 그 집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평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모두는 평화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목표이자 수단이다. 비록 더디나, 오로지 평화를 통해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평화의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벽돌을 쌓아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정전을 종전으로, 종전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

이예정은 2003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일하며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정책사업, 국제연대사업 등을 담당했다.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는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복귀하여 사업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한일관계의 미래 정치의 선택이라는 역사

서재준 (뉴스1) 외교안보부 북한팀장 · 북한전문기자

역사는 정치의 결과다. 사실을 모으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나는 역사는 순수한 기록이 아니라 결과물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도 시대와 기준의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다.

역사에서는 과거에는 사실이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거나, 왜곡된 사실로 판정되거나,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하는 것이 정치다. 중요한 분기점에서 위정자의 말이 의미를 갖는 것도 역사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끝나지 않을 것같은 굴곡을 그려온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때론 한일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때론 떨어진 관계를 접합할 수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역사와 정치가 구성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유지했던 관점과 다소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언급도 있었고, 반대로 예상보다 한 발 더 나간 듯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평가의 갈래도 다양한 것 같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먼저 우리 역사의 한

지점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맞이한 불행의 순간으로 묘사한 대목일 것이다. 이 ‘불행의 순간’이 어떤 시기였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꼭 짚어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3·1절 기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 발언은 대다수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로 표현되는 우리의 역사 중 일부가 마치 우리의 과오,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이에 대한 비판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맞물리면서 증폭됐다.

연설의 전체 맥락을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에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의 경각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문제의 발언’ 다음 문장에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중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3각 밀착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역사의 연계성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닷새 후인 3월 6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큰 조치를 취했다. 일본과의 중요한 정치적 합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연설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정신’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현재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해법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정치 속 역대 정권의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 역시 한일관계에 따른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역사와 정치의 연관성이라는 구조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라며 전향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침 일본에서 외교 중시 기조를 밝힌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출범하면서 한일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자 이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역대급 강경 행보를 보였다. 당시 그의 독도 방문은 한국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아주 뚜렷하게 나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역사문제를 대하는 정치의 선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지칭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때는 일본에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때다. 그러나 한일은 2015년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던 점을 되돌아보면, 이 합의 역시 ‘역사의 순리’를 따랐기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한일관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 시기에 한일관계를 움직인 요인은 우리 정부보다 일본 쪽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시기는 일본의 소위 ‘혁신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연합 정부가 들어서는 등 사회적 인식이 자민당 집권 때와는 많이 달랐다. 다소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1993년 〈고노 담화〉에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도출된 것은 일본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관계도 굴곡이 만만치 않았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다소 예측 불가능한 행보 때문이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집권 첫해부터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렇지만 집권 첫해인 2001년 방한했을 때 서대문형무소를 찾는 상당히 이례적 행보를 보였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과거 일본의 지도자와는 결이 크게 다른 모습도 보였다.

200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하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담화〉 이후부터 일본은 빠르게 우경화됐다. 2006년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제사

회의 비판에 대해 노골적인 불편함을 표하며 소위 ‘리버럴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사실상 접는 모습을 보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물러난 뒤 보수 우익의 상징으로 남게 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정권을 잡은 것을 보면, 집권 말기의 고이즈미의 행보는 일본 내부의 여론 변화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직후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무효화) 정치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말해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선택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무효화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선택을 바꾸지는 못했다. 2018년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일본의 보복 조치가 이뤄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한일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의 새로운 심화 속에서도 ‘남북 대화 중시’ 기조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도 이 시기 한일관계의 개선을 제한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확고한 철학 담긴 한일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는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묘사한 대목이 있다. 비록 윤 대통령은 그러한 과거의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이러한 진단을 ‘불가역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많은 정부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에 대한 인식 및 조치의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 단행해야만 했던 사실을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일관계를 한 번의 3·1절 기념사로 미리 소급해 평가 혹은 예측하긴 어려울 것이다.

제언하고 싶은 것은 한일관계 개선의 물살이 빠를 때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철학이 공고하다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또 한 번의 변화의 시기에 ‘단호한 선택’ 보다 ‘최대한의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역사는 정치의 선택’이라는 말에 반박이 되진 못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서재준은 2011년 〈뉴스1〉에 입사하여, 현재 외교안보부 북한팀장 및 북한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장기전이나 단기전이나?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2022년 2월 24일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인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은 1년을 넘겼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핵전쟁의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군인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물가 불안, 대규모 이주 사태를 겪으면서 1991년 소련 해체 못지않은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체성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선제적 방어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가치관의 전쟁, 미국의 사주에 따른 대리전쟁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의 안보 불안이라는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 항전 의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싸웠다면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중립을 보장받

고,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86%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이 전쟁이 '정체성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국민은 나토와 유럽이 번영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유럽으로의 서진을 선택했다. 1991년 독립 당시 구소련 국가보다 못살았던 루마니아가 지금 국민 1인 소득 1만 5,000달러의 나라가 되었지만, 2022년 러시아 진영에 머물렀던 우크라이나는 3,000달러, 자원 대국이라는 카자흐스탄은 아직도 8,0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나토가 동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향권 하의 구소련 국가들이 나토로, 유럽으로 서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러시아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도 슬라브주의에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1991년 독립과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2022년 전쟁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3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를 맞아 촛불로 만든 평화의 상징 앞에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연합

러시아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포위하면 48시간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도주하고 72시간 이내에 괴뢰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군

의 허술한 전력을 고려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망명을 권유했다. 그렇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흑해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인 오데사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물러갔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은 11월 남부 헤르손을 탈환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 수복을 노리고 있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로겠지만 이 전쟁의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가 다수 자행되었

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재산 약탈과 폭행은 물론이고 민간인 거주 구역을 포격 및 폭격하며, 저항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명백히 비무장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무고한 민간인을 사격하여 막대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러시아군이 한때 점령한 이르핀에서는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총을 쏘고 탱크로 깔아뭉갠으며, 부차에서는 민간인들의 신체를 절단하고 이를 뽑는 등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을 매장한 집단 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전쟁의 끝은 언제 어디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단기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여름에 서방의 화력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몰아낼 것이라고 희망적인 예측을 하지만 장기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체급, 민족성, 푸틴의 집요한 성격을 거론하며 수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지하자원, 농업생산과 군사적 능력에서 여전히 강대국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쟁 비용은 석유와 가스 수출로 충당하고 있다. 유가 상한제에 걸려 러시아 석유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판매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루에 석유 수출 대금만으로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석유를 제외한 철광석, 석탄, 알루미늄 등 지하자원 또한 수출하고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 미국 농업부는 2022/23 시즌에 러시아가 3,9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쟁물자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의 탱크를 생산하는 우랄자보드는 지금도 치장물자를 손봐서 끊임없이 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정밀부품이 없어 명중률이 형편없지만 러시아는 순항미사일도 계속 생산 중이며, 탄약도 불량품이 많지만 생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서방이 아무리 러시아를 경제제재해도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비결은 민족성에 있다. 러시아인은 인내의 민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에서 러시아인은 4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무려 872일을 버텼다. 기후적으로 극한의 추위를 갖고 있으며, 가혹한 전제 정치를 경험한 러시아인은 버티는 데는 세계 최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서방과 미국은 러시아인의 인내력을 당해낼 수가 없으며, 게다가 러시아는 그런 불만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독재국가이다.

푸틴의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는 성격도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014년부터 준비해왔으며, 전쟁 전후 과정에서도 어떠한 타협적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생존과 정체성의 전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체급이 다르고 버티기의 화신인 러시아를 이기려면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보급을 차단해서 적의 공세 역량을 소멸하여야 한다. 방어선 돌파는 러시아군이 무능, 무력, 무지성을 보이지만 엄청난 인명 손실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방법은 러시아군의 보급 역량을 단

기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크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패배했는데, 둘 다 러시아군이 보급을 받지 못하자 할 수 없이 백기를 든 것이었다.

지금 미국과 EU는 탱크와 장갑차, 야포 등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인도하고 있으며 이 무기에 훈련된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봄과 여름 동안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수복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 땅의 정복이 아닌 돈바스와 크림반도 해방이 그 정도의 목적이려면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쟁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기와 전략

전쟁의 승패는 체급의 문제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와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침략 전쟁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병사와 장교, 국민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어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핵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86%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불굴의 자세이다.

전쟁 전략과 전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압도한다. 러시아군은 대대전술단이 소멸한 이후 인해전술로 대응하고 있으며, 제병합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푸틴 또한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복인지, 아니면 돈바스 점령인지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사병들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전선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군인들이 전쟁의 명분에 공감하고 충분한 실전 경험과 물자 지원을 받는다면 현대전에서 병력의 열세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푸틴에게 남은 전술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독재국가의 특징을 살려 이 전쟁의 장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잘하는 게 버티는 것이고, 서방의 약점은 장기전에 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서방의 분열을 노리기 위해 현재의 전선을 영토로 고착하는 한국식 휴전을 제안하고 있다. 휴전만 해도 러시아는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 공화당 일부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휴전이 강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여름, 적어도 가을까지 현재의 전선에서 러시아를 국경까지 밀어내어야 한다. 전쟁 이전 상황까지 우크라이나가 진격한다면 러시아는 버틸 명분이 없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까지 차지한다면 푸틴 체제는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윤성학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 UzDaewoo Bank,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MEM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러시아 비즈니스》,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해》, 《모피로드》 등이 있다.

지행합일의 지성인이자 항일혁명가 계봉우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2019년 4월, 계봉우과 부인 김야간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로 한국으로 봉환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말년까지 간절히 원했던 고향 영흥으로의 귀환은 아니지만, 유해로나마 한반도로 돌아온 것이다. 3·1운동 후 망명한 지 100년, 사후 60년 만의 일이다.

계봉우(1880~1959)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전후였다. 그의 저술들이 소개되고 연구가 심화되면서 항일혁명가, 역사학자, 교육자, 언론인, 한글학자, 문학가, 민요학자로서의 계봉우의 진면목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계봉우는 러시아 한국학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하고, 지행합일의 전형적인 지성인으로서 백암 박은식이나 단재 신채호에 비견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유학이나 가문의 배경을 가진 백암이나 단재와 달리 함경도 영흥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독학을 통하여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민족혁명가 계봉우

1907년 계봉우는 신민회에 가입하며 항일운동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는 1910년 12월 망명 후 북간도와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에 종사하였으나, 1916년 11월 용정의 일본총영사관 형사들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유배(영종도)와 고향 영흥

에 ‘유리안치’되었다. 3·1운동 후 재차 망명길에 오른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항일혁명운동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그의 활약상은 항일민족혁명전선에서 그가 맡았던 주요 직책들(대한광복군정부 책임비서(1913~15), 철혈광복단 단장(1919), 상해 임시의정원 북간도 대표 의원(1920), 한인사회당·고려공산당 중앙위원(1920~21), 러시아공산당 원동부 산하 한인부 위원겸 선전선동출판부장(1920~1921))만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육자 계봉우

계봉우는 한말 계몽운동기에 고향 영흥의 흥명학교, 함흥의 영생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망명 후 1910년대 전반기에는 북간도에서 길동기독학당(광성학교)에서 조선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며 한인 자녀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당시 그는 『조선역사』, 『오수불망』, 『신한독립사』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1922년 10월말 시베리아내전이 종결된 이후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요청으로 한인 아동들을 위하여 『붉은 아이』와 같은 조선어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 9년제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쳤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동학원과 하바롭스크의 원동 공산대학에서 한인 교사와 노동자들에게 고려말을 교수하기도 했고, 항카호 근처의 스비아기노 일급학교, 스파스크 구역



1. 1916년 11월 28일 일본용정 총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 압송 시 계봉우 선생의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2. 상하이 시절의 계봉우 선생(뒷줄 가운데)과 동지들 (앞줄 왼쪽부터 현정건, 이동휘, 박진순, 김립, 뒷줄 왼쪽부터 김철수, 계봉우, 이종림) (반병률 제공)

북프로호리 초급중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다가 강제이주를 맞이하였다.

언론인 계봉우

계봉우는 망명이후 북간도에서 월간 한글 잡지 『대진』의 주필로, 1912년 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긴 이후에는 한인자치단체 권업회의 기관지 『권업신문』의 기자로 활약했다. 계봉우는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이 가져다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고의사 안중근전」을 『권업신문』에 연재하였다.

상하이 임시의정원 의원 시절에는 한인사회당 기관지 『자유중』 주필로 활약했고, ‘뒤바보’, ‘사방자(四方子)’라는 필명으로 『독립신문』에 「북간도 그 과거와 현재」, 「아령실기」, 「김알렉산드라 소전」, 「의병전」을 연재했다.

러시아의 원동공화국 수도 치타에서는 러시아 공산당중앙위 직속 원동부 산하 한인부가 발간한 잡지 『노동신문』의 발간을 책임졌다.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 의하여 수개월의 구금생활 후 석방되어 치타로 돌아와서는 조선인청년회 한글 잡지 『새사람』의 주필로 필봉을 날렸다.

역사학자·한글학자 계봉우

계봉우 선생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면서 공개적 활동을 자제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필했던 교과서

와 신문 기고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그 성과물이 『과학의 원수』, 『고려인의 구력과 명절의 미신』, 『동학당 폭동』, 『조선 역사』 1·2권, 『고려어 교과서』(강채정과 공저) 등이다. 60세가 되는 1940년 이후 연금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서 평생의 학술적 성과들을 완결하기 위한 집필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조선말의 되어진 법』, 『이두집해』, 『조선문법』, 『조선문학사』(1~2권), 『조선역사』(제1~3권), 『조선말의 되어진 법』 등이 그 결실이었다. 안타깝게도 회고록 『꿈속의 꿈』의 원본을 비롯하여 그의 소중한 저술과 원고들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계봉우는 1927~30년에 걸쳐 한글신문 『선봉』에 많은 글을 기고하였는데, 러시아의 교육정책, 종교와 미신 타파, 한글 문법 등 한인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한인사회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논쟁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는데, 오창환 집필의 『고려문전』 논쟁과 한자폐지론-한자제한론 논쟁이었다. 이들 논쟁은 과거 혁명운동 시절 상해파에 속했던 계봉우가 이르쿠츠크파 출신의 주요 논객들과 언어생활 분야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전개했던 매우 유의미한 논쟁이었다. 🌈

반병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다.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성재 이동휘 일대기』,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남한에 남은 사회주의 혁명가 김철수』,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 등 다수가 있다.



패션을 통한 통일

김승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남북통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통일의 주체인 인간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믿는 것만을 실천한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하고픈 것과 믿는 것이 같으면, 즉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얘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 공감대를 패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MZ세대에게 ‘나를 나답게 표현하는 개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패션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 중요도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북 또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옷을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 이외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개념을 북한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그러한 점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남북 주민들이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면, 남북통일을 향한 작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우선 패션이 어떻게 인권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최근 북한 보도들을 보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단속한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구소련에서도 옷차림에 대한 제한이 존재했다. 예컨대,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하거나 보석, 금은과 같은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이후 외국·서양문화가 점차 퍼지게 됨으로써 당시 ‘스틸야기’라는 운동이 시작됐고, 그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은 북한처럼 규찰대의 단속 대상이 됐다.



남한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미풍양속 보호를 명분으로 행인들의 두발과 복장을 검사하며 제약을 가했다. 경찰들은 장발도 단속했으며 기준을 벗어나는 머리는 가위로 직접 자르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패션 스타일 제한의 역사를 보면, 옷이란 현재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문화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왜 필요한지, 패션 스타일이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뒷받침할 증거로, 인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한 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인간 개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인정받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패션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자 자기표현이며, 타인에

게 보이는 1차적 시각 요소이기에 개인의 개성 표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언급했다.

이제 패션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가설을 북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여 민족화해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자.

북한 사회에서 패션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북한전략센터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영문 프린팅이 된 옷, 노출이 있는 옷, 청 소재의 옷에 대한 단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 특징이 드러난 패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응답자 본인이 출신 국가에 거주할 당시의 느낌을 질문하였다.

해당 이미지들에 대한 북한 출신들의 부정적 반응의 평균은 48%로, 한국 출신들의 부정적 반응의 평균인 23.4%보다 2배 이상 높고, 그 외 국가 출신들의 부정적 반응의 평균인 15.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패션에 대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기 어렵고, 의복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장마당 세대의 증언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흡사하게도 청 소재의 옷, 노출이 있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 (미니스커트, 짧은 반바지, 시스루 등)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청 소재 패션에 대하여, “미국을 상징하는 옷이어서”, “남조선 깡패들이 입는 옷이어서” 등의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당국의 선선동에 패션 스타일이 이용되었음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도 세계 어느 곳과 같이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북한 출신 MZ세대의 증

언도 있었다. 그는 “내가 탈북하던 직전 시기에 나팔바지가 유행했다. 몇 줌 부릴 줄 아는 친구들은 열이면 열, 바지를 수선하거나 새로 옷을 맞추는 노력까지 들었다. 원래 일자형 바지인 근위대 훈련복마저 나팔바지로 변형하여 입곤 하였다”라며 회고했다. 또 다른 장마당 세대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브랜드 옷을 선호했으며 입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옷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없었고,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사 입을 수 없었다. 생일에 선물로 이런 옷을 받은 기억이 있다. 한국에 온 이후 북한에 있을 때 입고 싶었던 브랜드 제품을 사 입기도 해보았다”라고 말했다. 제한된 패션 스타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있을 때 따라 하고 싶었던 스타일을 한국에서 직접 시도해 본 사람들의 답변은 ‘자존감, 자신감이 보강’되거나 ‘스스로의 선택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 장마당 세대는 “내가 입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해서 입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정된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렇기에 북한과 같이 사실상 외부 정보 유입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주민 일상으로의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옷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진다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깨어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옷차림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북한사회에서, 원하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것은 남북의 새로운 공감대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

북한, 우리도 잘 안다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EU유학원 원장

북한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안보 불감증으로 불릴 만큼 한국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관대’하다. 이런 관대함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평양냉면, 북한의 군 체계,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사 등 우리가 일상에서도 관심 갖는 주제가 북한이다.

뉴스에서 우리만큼 북한에 주목하는 국가도(현실적인 이유로) 없을뿐더러, 일상에서 대북 담론을 형성하고 논하는 사람들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보면 80년 가까운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남은 한민족 정서(sentiment)가 남과 북을 정서적으로 잇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문제에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의존하는 대북 싱크탱크(think tank)의 본고장 미국,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점유하는 중국. 이들 나라에서는 과연 북한이 핵심 관심사인가? 미국의 경우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해야 할 곳이 기본적으로 많다. 물론 특정 시기, 특정 기간에 북한을 예외주시한 적도 있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국 내 화두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미국은 서방세력을 대표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한 대러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 발사에 이어, 20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쏘았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올라갔지만, 미국은 국무부 장관 차원의 규탄성명 발표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했다. 결국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 전선에서 지정학적 린치핀(linchpin)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은 북한 문제를 언제든 지금처럼 뒤로 할 수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조력할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견제나 주목을 받을 때이다. 현재 뉴스만 보더라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목을 끌만한 왕래는 없다. 물론 중국은 2월 20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



발을 규탄하는 공개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관례적 레퍼토리가 아닌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지속되어온 대만의 친미 행보는 중국 지도부에 여러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즉, 북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며, 현재 북미관계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중국한테 북한은 미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할 외교카드조차 못된다. 이걸 북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외교·안보 문제로 포화된 상태여서다.

미국과 중국이(정확히는 북핵으로 인해)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높을 것이란 기대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갖는 기대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인식을 추적해온 ‘독립연구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북한과 인접해 있는 것도 우리고, 북핵과 통일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도 남과 북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지닌 대북 정보통으로서의 소위 ‘우위(advantage)’도 분명히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

보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평가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한 통일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 관련 외교·안보 현황을 접한 다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첫째, 미국의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막상 북한을 모르는구나. 둘째,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할걸.

남북 긴장관계 완화와 통일 담론 활성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알아가는 데, 미국과 중국의 역할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하나는 북한과의 교섭력을 이 두 강대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국가의 대북 정보력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대북 교섭력에 관한 주장은 외교구도 상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북한에 집중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민간에서, 관료사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북한에 주목한 우리가, 종합해보면 북한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북 문제에 있어 우리의 ‘이해’에 대해 자부하고, 미국과 중국을 의식하는 ‘겸손’은 조금 뒤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남북교류협력 재정비의 시기, 베이스캠프 역할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글 이현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남북교류협력 멈춤의 시간이다. 남북경협이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멈춘 지 7년이 지났고, 근근이 이어지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대북 인도적 협력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9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낙근 회장은 협회 본연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교류협력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며 남북교류 재정비의 시기로 삼겠다는 그를 2월 23일 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낙근 회장은 오랫동안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남북관계를 다루어 온 연구자이자 정책전문가이다.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학계와도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어왔기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도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직을 맡았지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어깨가 무겁다. 그는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눈팔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려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등의 ‘거창한’ 포부를 협회 회장이 말하기엔 솔직히 쭉쭉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위축되어 있던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협회가 기능을 정상화해야 남북관계 경색을 풀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 재개 준비하는 베이스캠프 역할 필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6년 남북 당국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이행 기구를 지정·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2007년 출범했다. 출범 후 15년이 지났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조직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져 왔지만, 요즘 같은 남북관계 흑한기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선거 캠프를 예로 들면서, 지금이야말로 교류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개 선거를 보면 공식 선거기간은 며칠 안 되지만, 캠프는 아무리 늦어도 선거 6개월 전에는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모든 전략과 공약이 만들어집니다. 남북교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법·제도적 정비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아이템 발굴과 방법론 등도 개발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런 일을 하면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베이스캠프로서 역량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전문가이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는 남북관계 대결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으리라 전망했다. 지금 북한이 향후 10년의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여러 카드를 쓰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 업 앤 다운이 있듯 남북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시간문제일 뿐, 공멸이 아닌 공생을 모색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에 현재를 교류협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 회장은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제는 더 이상 교류협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류협력은 남과 북의 신뢰 회복과 호혜 발전, 상호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과 북 모두 학습효과는 있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교류협력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류협력이 무조건 선(善)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는 교류협력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동포애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체계 만들어야**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인다. 한계는 보완하고 성과는 다지면서 더 나은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의 일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도 단속(斷續)을 반복해온 만큼,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 교류협력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남과 북의 의지는 물론이고 시스템 정착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희망이나 결단만으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나 동포애에 기댄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속성이 나옵니다.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포애 차원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의 아이템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문화,

의식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등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놨다. 다만 남북관계 속성상 ‘북한’이라는 국가성이 강조되면 정치화되기 쉬우므로, 국적보다는 순수한 인도주의 목적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구호는 국적보다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를 ‘대북’지원으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북지원으로 규정하면 긴급구호는 정치적 행위로 바뀌어 인도주의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하는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이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과제이다. 정 회장은 민민관관(民民官官)을 강조했다. 민(民)은 민다워야 하고, 관(官)은 관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빠지지 말고, 각 주체의 취지에 맞는 교류협력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민간단체는 남북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경험기업은 자기 책임성을 바탕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주의 상거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합의를 하고 또 무리하게 추진할 때 결국 문제가 됩니다.”

이어 정 회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



지난 2월 16일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낙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로 창의성, 현실성, 지속성, 합법성을 꼽았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합법성과 창의성이라며, 보수적인 법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제대로 된 교류협력을 하려면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는 아이템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의력을 적극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협회도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기본에 충실하며 남북교류협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이렇듯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국민적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서부터 교류협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이념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부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남북관계에 다소 보수적인 사람도 만나고, 교류협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 경험과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그는 협회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법에서 명시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정관 2조는 ‘협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정책 건의, 정부 위탁업무 수행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부터 진행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교류협력 관련 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낼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커다란 성취에 집착하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낙근 회장은 기본에 충실하며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담담하게 소신을 밝혔지만, 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한걸음들이 모여 남북교류협력의 더 나은 새 길을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민화협 제25차 정기대의원회

“분단극복과 민족화해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

글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 사진 김성현 객원 작가



민화협 제25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우수 회원 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분단극복과 민족화해를 위한 2023년을 만들어 가겠다 의지를 다졌다.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차 정기 대의원회에 이종걸 대표상임의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형진(세종텔레콤 회장) 상임의장과 공동의장, 집행위원을 비롯한 회원단체 등 11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의 대회사와 민화협 우수회원 활동가(활동단체)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대회사에서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남북 당국을 향해 상호 적대적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견고해져가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는 ‘신냉전’이라 불리며, 남과 북에 극심한 정치적·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자칫 한반도가 또 다시 열강들의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당국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 상황을 타파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상임의장은 “우리 민족은 분단 100년을 향해 가고 있다”며 “분단의 ‘영구화’를 걱정했던 우사 김규식 선생의 외침처럼, 통일된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독립



대의원회 의장인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이 안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투사들처럼, 이산가족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민화협이 분단극복과 민족화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민화협 우수회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단체 부문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수상했다. 개인 부문으로는 이범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선경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상임의장, 황만기 대한한의학협회 부회장, 손병희 민화협 문화예술위원장,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이원호 남북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 성기영 민화협 정책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김도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김민아 민화협 부장이 받았다.

2부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제13기 임원선출의 건이 통과됐다. 올해 민화협 주요 활동 방향으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발맞춰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와 범국민적 통일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단체와 연대와 협력

을 강화하고 위촉된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이자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로, 관련 추모사업과 ‘한반도 평화 행동’을 실천하는데 회원단체부터 해외 동포사회까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사회 내 갈등해소와 통일준비를 위한 지역·분야·세대를 아우르는 남북대화를 정례적으로 열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위한 국민적 숙의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13기 임원도 선출됐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이 연임하는 가운데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상임의장으로 새로 선출됐다. 공동의장은 기존 12기 25명이 연임을 하고,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상임의장(경기대 명예교수)과 윤경로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전 한성대 총장)가 새로 선출됐다. 제13기 임원 임기는 2023년 2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민화협은 설립취지에 따라 우리 사회 내 통일담론을 쌓는 과정에서 보수·진보·중도의 각 계각층을 아우르면서 회원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사업 집행에 있어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제주 추도제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그 후 5년 그리고 지금

이옴 민화협 1020통일공감 기자단



지난 3월 2일 제주 선운정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제가 열렸다.

2018년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은 일제에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을 기리고자,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에 뜻을 모았다.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 유골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이다. 이 운동은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송환 추진위원회> 결성, 이후 일본에서 '남·북·일 조선인 유골송환 공동추진위원회' 구성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9년 74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다. 2018년 11월, 일본 오사카 통국사(統國寺)에 기신 74위의 유해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라는 것을

기록한 명부가 확인되면서 조국으로 모실 준비를 했다. 마침내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같은 해 2월 27일 통국사에서 인수식을 거행했고 28일 오후 74위가 귀향(歸鄉)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된지 75년이 다되어서야 조국 땅을 밟으신 것이다.

3월 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3월 2일 제주 선운정사에서 안치식이 거행된 후, 74위는 평화의 섬 제주도로 모시게 됐다. 이어 5월에는 일본 통국사에 추도비 제막식을 갖고 사찰 경내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옆에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비가

세워지게 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 선운정사에서는 매년 3월 2일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 3월 2일에도 제주 선운정사에서는 생전 나라를 잃고 타지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선조들의 한을 달래는 법요가 있었다. 매년 잊지 않고 추도제를 챙겨온 선운정사 주지 현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추도법회에 함께 하고자 제주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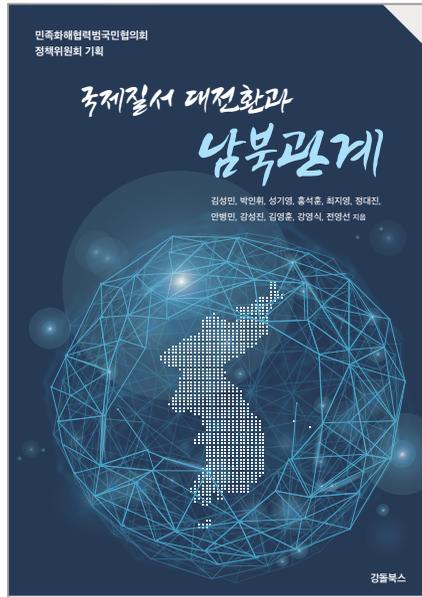
진정한 화해는 통렬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현오 스님이 일제에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유해 봉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 후지키 쇼겐 스님과 만났기 때문이다. 후지키 쇼겐 스님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일본 오키나와로 강제징용 되어 끌려간 조선인 740명 청년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일본인이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 가장 격렬하게 미국과 일본이 전투를 치른 곳으로, 740명의 조선인 청년병사들은 매일 밤마다 구슬픈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국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직전 치열한 전투 속에 740명 모두 몰살당했다.

쇼겐 스님은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유해라도 수습하고 영혼을 기리고자 오키나와를 다시 방문하려 했으나, 당시 오키나와는 민간인 출입통제를 했었다. 단, 종교인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출가를 하여 스님이 되었다

고 한다. 이후 이들의 유골을 수습하고 한국으로 희생자들의 유해를 보내고자 노력했으나 남북 분단,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쇼겐 스님은 오키나와에 위령탑을 세우고 추도제를 열어 그들의 원혼이라도 고국에 보내고자 했다. 오키나와 평화공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한국인 위령탑'이 있는데, 쇼겐 스님은 위령탑을 세울 당시 대한민국 전국 팔도의 돌을 가져가서 봉분 아래에 함께 놓았다고 한다. 매년 이곳에서 740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제가 열렸는데, 이 위령탑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현오 스님이 쇼겐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현오 스님은 위령탑을 고국으로 옮겨 오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위령탑이 부서질 위험이 있어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인 학도병에 대한 미안함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추모했던 후지키 쇼겐 스님은 2014년 4월 사망과 함께 제주 선운정사에 안치됐다. 오키나와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조선인 전우들의 영혼과 함께 편안히 잠들고 싶었던 유언에 따른 것이다. 현오 스님은 쇼겐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2019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74위의 유해를 선운정사에 안치시키고 매년 추도제를 열어 그들의 한을 달라고 있다.

현오 스님은 추도제를 치르면서 여러모로 힘에 부치고 때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백성들이 타지에서 무참히 희생된 한을 지금이라도 이루어 만지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슬픈 역사를 외면하고, 이와 함께 그 역사도 점점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고자 매년 열리는 추도제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유해봉환과 같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과 종교 단체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일 관계가 개선되어 일본에 기신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길 바란다. 🌸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발간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민화협 제11기 정책위원회(정책위원장 김성민·황재옥)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남북교류 재개를 준비하고자 정책보고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강동복스, 2022.12.30)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1부 '대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반도 정세'와 2부 '대전환 속 대북정책 제언'을 다루며,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학식과 경륜을 오래 쌓아온 석학들의 냉철한 시각과 이제 막 한반도 문제에 열의를 갖고 연구 중인 신진학자들의 참신한 관점을 함께 싣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함께 참여한 필진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1장 '동아시아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2장 '국제질서 대전환과 한반도(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3장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배경, 전망, 향후 과제(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4장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5장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경제(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1장 '최근 5년간 남북관계 변화와 새

로운 모색(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2장 '북한의 교통 SOC 현황과 개발 협력 방향(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연구원장)', 3장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4장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지원 접근 방향(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5장 '인도지원과 개발협력(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6장 '북한 사회 문화 변화 전망과 대응(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이 담겼다.

이번 정책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김성민 정책위원장은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특성상 국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처한 '대전환기'라는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집단지성의 힘'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간사에서 "대전환기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불러오게 된다"며, "어떤 정부라도 완벽하게 그 변화에 대처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연구자, 활동가들의 경험과 조언,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성을 믿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위한 작지만 요긴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도 전했다.

롯데장학재단 - 민화협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공모



2022년 10월 28일 진행된 제4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시상식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이 2023년에도 북한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함께 한다.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을 실시하며, 박사급 16편과 석사급 6편 총 22편에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제는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분야이나, 기존 여타 사업들에서 해오고 있는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박사급과 석사급으로, 박사급은 박사학위 수료자 및 취득자, 석사급은 석사 학위 취득자가 해당된다. 전공은 무관하며 응모자의 응모 논문 수도 제한 없다. 또 응모자 포함 4인까지 주저, 공저로 지원가능하나, 타 연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본 사업 공모 일정 전에 발표 또는 게재된 논문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연구비 규모는 박사급 편당 700만 원, 석사급은 편당 500만 원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논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후보자를 선발해 10월 중순에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 상장과 상금이 추가로 수여된다.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집 받는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이번 장학사업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나갈 독립유공자 50명을 선발 지원한다. 2023년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1·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적 상관없이 증·고손에게까지 해당된다. 장학금은 1인당 총 6백만 원으로, 올해 8월 1박 2일 역사캠프도 운영해 단순 학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후손들이 함께 따르는 자리도 마련한다. 최종 선발 발표는 심사과정을 거쳐 5월 초에 공지할 예정이다.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과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화협 홈페이지(www.kcrc.or.kr), '알림마당' 공지로 확인할 수 있다.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지난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100명 의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와 국회가 간토대학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다시 나섰다. 유기홍 의원실과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100명 의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올해는 1923년 일본 간토지역 대지진과 이에 따른 조선인 대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법은 간토대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기념사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특별법 추진을 두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100주년을 맞아 특별법을 제안한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을 넘어서 앞으로 일본 정부와 의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한일 시민사회가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과거 2003년 경 일본변호사협회가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간토대학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일본 정부와 의회가 관심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만열 공동대표는 "진상규명은 보복차원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첫 단추"라며, "민족문제에서 여야가 없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학살피해자 남성규 씨의 유족인 권재익 씨도 함께 했다.故남성규 씨는 피해자 중 이름과 학살 경위가 밝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분이다. 간토대지진이 일어날 당시 YMCA 총무였던 최승만은 회고록 <극용필경(極熊筆耕)>에서 학살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유족인 권재익 씨는 "우물에 독을 탔다, 불을 질렀다"는 거짓 유언비어와 혐의를 몰아내지 않으면 유족은 폭도의 후손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유족들이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는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최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만큼은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화협 상임의장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민간 48개 단체들이 모여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내용과 활동사항을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족과 역사 정의를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아 통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강제동원문제와 깊이 연관된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을 두고 우리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의장은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거래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회

복하는데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2022년 7월 12일 간토대학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도활동을 계승하기 위해 48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됐다. 지난 1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주요 사업과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추진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1923한일재일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한일 시민들의 참여로 건립되는 간토학살 피해자 추도 공간 조성 △100주기 한국 추도식 공동주최 및 일본지역 추도식 참석 △간토 역사 상설전시 및 역사 대중화 사업 등 한국과 일본의 궁극적 평화를 위해 세계 민주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관광 자원으로 거듭 나고 있는 북한의 자연유산

김정은 시대 국제보호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 군사 분야를 제외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주제로 신진학자들의 논문 공모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김명신 북한학 박사 · LG AI연구원



북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 금강산의 설경

유네스코는 흔히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지정사업 중에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와 같은 국제보호지역 사업도 있다. 국제보호지역이란 하나의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자연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기구 등이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을 말한다.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는 국제보호지역 활동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은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10월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고위간부)들과 나눈 담화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2015년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2014년 담화 이후 <표1>과 같이 2015년 <문화유산보호법>(2012)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하며, 처음으로 자연유산을 민족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북한은 2015년 이전에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과 <자연보호구법>(2009) 등을 통해 별도로 보호지역을 관리, 보존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자연유산이 민족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

보호지역 등재 사업이 당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1. 북한의 유산보호법 변화>

문화유산보호법 (1994)		문화유산보호법 (2012)		민족유산보호법 (2015)	
문화 유물	역사 유적	물질 문화 유산	역사유적	물질 유산	역사유적
			역사유물		역사유물
역사 유물	비물질 문화 유산	국가비물질 문화유산	비물질 유산	구전전통, 사회적 관습, 전통수공예 등	
		지방비물질 문화유산	자연유산	명승지(산, 호수, 동굴), 천연기념물(화석, 자연비위) 등	

실제로 북한의 국제보호지역은 김정은 집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칠보산 생물권보전지역과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 <람사르 협약> 가입과 함께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라선 철새보호구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1989년에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에 추가로 신청했으며, 2021년에는 금강산을 세계복합유산(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백두산과 금강산에 대한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만약 백두산과 금강산 지역이 세계지질공원과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보유하고 될 총 9건의 국제보호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건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정되게 된다.

〈표2.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 국제보호지역 지정 비교〉

구분	김정은 집권 이전	김정은 집권 이후
총개수	3건	6건
세계자연유산	-	금강산 등재 추진 중 (※ 세계복합유산, 현장실사 대기)
생물권보전지역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칠보산(2014), 금강산(2018)
세계지질공원	-	백두산 등재 추진 중 (※ 현장실사 대기)
람사르습지	-	문덕(2018), 라선(2018)

북한이 국제보호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 복원 등 자연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연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보호지역 사업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보호지역을 통한 환경 협력은 상대적으로 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역량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게 국제보호지역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 식도락, 위락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 유치는 단순히 호텔이나 각종 인프라의 보강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외래 관광객은 그들로 하여금 북한 관광만의 차별적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북한방문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게 국제보호지역이 갖는 부가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인정한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 지질·지형학적 가치 등의 국제적인 브랜드를 북한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태관광’의 의미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노동신문>은 “세계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와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관광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971년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인간과 생물권계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원칙을 내놓은 후” 생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덧붙여, 신문은 “여러 나라들의 명승지들이 세계생물권보호구,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해양공원 등으로 등록되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연하며, 현재 세계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생태관광이 북한의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대표적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등이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대외적으로 북한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과 2015년 금강산과 백두산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무봉국제관광특구’, 2014년 금강산, 원산, 마식령스키장

등 6개 지구를 묶어 설정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주요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모두 자연을 체험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생태관광은 환경보호가 해당 관광 상품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과 달리 도시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게 생태관광은 소규모 투자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생태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한의 자연유산과 남북협력

김정은은 짧은 후계자 기간을 거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며 정통성 문제 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이 선택한 방법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인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 국내외에서 정상적인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젊은 지도자가 선택한 방법은 관광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과 활동은 국제보호지역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민족유산을 우리나라제일주의 정신을 높이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개최된 북한의 제8차 당대회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

광산업의 집중 육성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제보호지역은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큰 자본 투입 없이 관광 상품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국제보호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는 한국과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 남북 양자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다자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정색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유네스코를 통해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등재 및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조사나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워크숍 등을 유네스코 신탁기금 형태로 북한에 제안하고, 이를 매개로 중단되어 있는 남북관광 사업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보호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협약과 규범의 이행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이해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학 속 통일미래 36

'구(舊) 빨치산 출신' 사회주의자 부친의 장례 풍경, 애도로서의 사부곡(思父曲)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론

오테호 문학평론가 · 경희대학교 교수

1. 부친 사망에 대한 '평어(平語)형 애도'라는 역설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2022)는 남로당 출신의 고지식한 사회주의자 부친의 사망 후 장례식 풍경을 통해 부친의 삶과 죽음을 조망하는 작품이다. 작품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도발적인 ‘평어(平語)형 문장’으로 시작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존대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애비는 종이였다”라고 선언하는 서정주의 시 <자화상>(1935)에 버금갈 정도로 가부장적 위계를 넘어서려는 과감한 시도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미 1990년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발표하면서 빨치산 투쟁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삶을 기록자적 관점에서 실록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는 ‘아버지의 장례’라는 죽음 의례를 수행하는 화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부친의 삶을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담담한 애도’를 지향한다. 작가는 「작가의 딸」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나 잘났다고 뽐대며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면서, 자신의 “오만했던 청춘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결국 ‘역사적 실록’으로서의 <빨치산의 딸>에서 벗어나, 32년이 지난 후 새로이 작업한 ‘문학적 애도’로서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대문자 역사(History)’ 이면에 자리한 ‘개인의 소소한 일상사(history)’를 추적한 텍스트가 된다.

2.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아버지 들여다보기

1) 사회주의자 아버지와 현실주의자 딸 사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유일한 상주’가 된 딸의 시선으로 부친의 장례식 풍경을 조망한다. 태어나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던 화자 ‘나’의

이름은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아’와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따서 ‘아리’라고 지어진다. 그만큼 부모가 빨치산 활동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의 아버지는 1948년 초 5·10단선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혀 성기에 전기고문을 당한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 하지만 부친은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인 한의사를 만나 약 한 제를 지어먹고 화자를 낳을 수 있게 된다.

4세 때 화자는 아버지의 알몸을 보면서 ‘인생 최초의 깊은 슬픔’이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결여’를 느낀다. 아버지와 자신의 생식기 차이를 확연히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화자의 우주’에 해당했던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간 뒤 세상 전부를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든다. 그리고 고1 무렵에는 ‘자신의 탄생 비화’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존재”인 듯 ‘이방인적 존재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웠던 기억을 떠올리던 화자는 아버지가 ‘가부장제와 소시민성’을 극복한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회상하게 된다.

화자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기 8일 전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아 3만 원만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자식이든 이웃이든 남에게 절대로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리게 만든 비용이 고작 3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화자는 30만 원을 보내면서 “늙은 혁명가의 비루한 현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화자는 ‘친밀했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부활시키면서 아버지와 화해와 애도를 수행하게 된다.

2)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원근감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친척과 이웃의 문상을 통해 아버지가 고향이자 전장이었던 구례에서 살아낸 내력을 증명한다. 먼저 대표적인 친척 두 사람을 살펴보면, 한 사람은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했던 작은아버지로 아버지와 평생 원수처럼 지낸다. 1948년 가을 군인들이 9세였던 작은아버지의 등에 총을 겨누고 마을로 내려와 할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 할아버지의 주검 곁에서 오줌을 지린 작은아버지가 혼절한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작은아버지는 면당위원장 형을 자랑했다가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게 했다는 자책 속에, 결국 홀로 평생 공포와 죄책감을 감당해내야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친척 중 하나로 위암 말기인 큰집 사촌 길수오빠는 ‘빨갱이 작은아버지’ 때문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에 걸려 입학하지 못했다가 군에서 제대한 뒤 연좌제가 풀린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곧 죽을 몸으로 죽은 자를 조문”하러 온 오빠가 “괜찮다.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화자는 “자기 상태가 괜찮다”는 것인지 “죽음이란 것도 괜찮다”는 것인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도 살아질 테니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눈물이 솟구친다. 오빠는 ‘고요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까지 덤덤하게 수궁하면서 이미 “죽음 저편의 공허”를 응시한 듯한 시선으로 화자를 바라볼 뿐이다.

문상을 오는 두 번째 부류 중 대표적인 이웃 세 사람을 살펴보면, 먼저 장례식장의 공동 주인인 황 사장은 자신의 부친이 섬진강을 도강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화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게 된다. 둘

째로 학도병 소속이었던 박 선생은 지리산에 파견되었다가 예편한 뒤 교련선생으로 세월을 보내지만, 자기 손으로 형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은 채 ‘시름에 싸여 있는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하염없다’는 말을 곱씹으며 살아간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담배 친구라며 문상을 왔던 오거리 슈퍼 손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함께 문상을 와서 아버지가 알려준 쓸쓸한 노래 〈클레멘타인〉을 부르며 애도를 표한다. 이렇듯 ‘동네의 머슴’을 자칭했던 아버지는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텅없이 ‘사람을 믿는 순진함(=어리석음)’이 있었기에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말을 ‘18번 노래’처럼 반복한다.

3) 유물론자 아버지의 신념 어린 삶

화자가 고등학교 시절 ‘전직 빨치산’이었던 아버지 고상욱은 2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고향인 전남 구례에 터를 잡게 된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초짜 농부’가 된 아버지는 『새농민』을 탐독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문자 농사’로 일축되는 농사를 짓지만, 번번이 망치게 된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민중’을 앞세운다. 국방군의 포위 직전 아지트를 빠져나와 곡성군당을 살렸다는 ‘전설 속의 혁명가’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낫모르는 방물장수 여인의 몸에 있을 벼룩을 문제 삼는 태도를 보면서 지리산에서 목숨을 걸었던 ‘민중’이 그 여인이라며 비판한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은 “치형 직전의 독립운동가나 학살당한 동지의 시신을 목도한 혁명가”만큼 진지하고 비장한 모습이지만, 다음날 ‘아버지의 민중’은 마늘 반 접을 훔치고 화자에게 벼룩을 남긴 채 도망친다. 화

자의 부모는 ‘순수한 사회주의자’이자 ‘물정 모르는 촌뜨기’로서 낯선 여인을 환대한 셈이다. 아버지는 사회주의자가 일상에서부터 유물론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몰락의 원흉’이라는 양가적 존재인 아버지는 유물론자답게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워디 묻히고 안 묻히고, 고거이 뵈이 중하대?”라고 말하면서 “꼬실라서 니 괜한 대로 암 디나 뿌레뿌레라.”고 전한 것이 유지였던 셈이다.

먼지에서 시작된 생명은 땅을 살찌우는 한줌의 거름으로 돌아가는 법이라는 것이 유물론자 아버지의 올곧은 철학이었지만, 화자가 보기에는 “쓸쓸한 철학”으로 여겨진다.

1952년 아버지는 위장 자수를 하면서 빨치산이 전멸하기 전에 조직을 재건해야 한다는 정세판단을 했지만, 결국 조직 재건을 수행하다가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다시 같은 판단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향을 하고 출감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동지들에게 아버지의 자수는 ‘고결한 혁명가’에게 ‘있을 수 없는 변절’이자 ‘중차대한 타락’으로 인식될 뿐이다. 결국 화장된 아버지의 유골은 아버지의 유지처럼 ‘중앙교, 반내골, 노인정, 오거리 슈퍼, 삼오시계방’ 등등 구례 곳곳에 아버지의 유의미한 삶의 흔적이 있었던 곳에 뿌려진다. 그렇게 화자는 아버지와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3. 빨치산 출신 사회주의자 부친의 생멸에 대한 ‘절절한 애도’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쓸쓸한 사회주의 혁명가의 사후 장례식 풍경을 ‘빨갱이의 딸’

인 화자의 시선으로 조망한다. 그리하여 부친이 불과 4년 동안 경험했던 빨치산 생활이 이후 감옥 생활과 고향 구례에서의 60년 넘는 일상을 좌우하는 ‘주홍글씨’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신념에 찌든 젊은 사회주의 혁명가의 위장 자수와 전향 이후에도 유물론적 지향의 일상은 이어진다. 한국 사회의 금기였던 ‘레드 콤플렉스’를 넘어 ‘민중적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상욱은 그렇게 이성을 하직한다.

작가는 이미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통해 ‘1980년대 민중문학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삶을 정리한 바 있다. 실록 소설이었던 〈빨치산의 딸〉과 다르게 허구적 진실로 쌓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상적 삶과의 담담한 화해를 다루고 있다. ‘혁명가이자 빨치산, 자식이자 형제, 남자이자 연인, 남편이자 아버지, 친구이자 이웃’ 등 솔하게 많은 페르소나를 연기하면서 “천 개의 얼굴”을 지녔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가는 아버지의 삶을 넉넉히 수용한다. 그리고 진정한 애도는 ‘아버지의 삶과 죽음, 신념과 일상, 이웃과의 관계’ 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껴안는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빨치산의 딸’이 이제야 비로소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애도’로서의 ‘해방일지’를 집필한 셈이다. 🌈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학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5

식목일과 식수절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 대한하키협회 회장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이 다가왔다. 산과 들도 연두색 잎을 틔워 초록빛으로 물들어 가는 계절이다. 하지만 우리 강산이 이렇듯 풍성한 나무로 가득하게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국토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동안 산림을 가꾸기 위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왔고, 산림자원 증가율(2015년 기준)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복구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식목일을 제정해서 숲을 가꾸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숲 가꾸기를 우표를 통해 들여다보자.

우선 남측의 식목일은 4월 5일이다. 1949년 제정된 이래 1960년에 잠시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되었다가 다음해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이후 지속되다가 2006년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 산림녹화와 관련된 첫 우표는 1953년 발행된 묘목을 심는 모습이 담긴 1환짜리 보통우표다. 이후 세계산림회의, 녹화운동, 국민식수기간과 관련된 우표들이 발행되었다.

북측은 우리의 식목일을 식수절이라 부른다. 북측의 식수절 제정도 전후 산림복구의 필요성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수절은 1971년 제정 이후 정치적 이유에서 몇 차례 시기가 바뀌어왔다. 김일성 주석이 1946년 4월 6일 문수봉에서 나무를 심은 것을 기념하여, 4월 6일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3월 2일로 변경되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아내 김정숙, 아들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모란봉에 올라 나무를 심은 날짜로 변경된 것이다. 이후 2022년 다시 3월 14일로 변경되었는데, 1952년 3월 14일 김일성 주석이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국적으로 복구할 것을 지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숲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야생동식물의 생태계 조성, 임업과 산림식품의 생산증대, 산사태, 수해, 사막화 방지와 공기정화 기능은 물론, 이제는 탄소배출권이라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그동안 산림청 산하 남북산림협력단과 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다. 국토가 이어져 있는 남북은 서로의 산림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앞으로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더욱 푸르게 가꾸어 나가기위해 두 손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



North Korea

1. 어린이 생활 우표 중 나무심기 / 1961.8.29
2. 식수절 / 1995.4.6
3. 식수절 50주년 기념우표 / 1997.4.6
4. 식수절 50주년 소형시트 / 1997.4.6
5. 산림복구 / 2016.1.25



South Korea

1. 식목 1환 보통우표 / 1953.4.5
2. 4차 세계산림회의 / 1954.12.12
3. 애림녹화 운동 / 1966.4.5
4. 국민식수기간 특별 / 1975.3.20.
5. 세계산림총회기념 / 2022.4.5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기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대로 배워서 풍년을 이루자 〈우렁이 소동〉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모내기를 앞두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의 가장 큰 소원은 풍년 농사이다. 제 때에 농사를 시작하는 적기적작과 땅에 적합한 품종을 심는 적시적작, 그리고 김매기를 잘하는 것은 농사의 기본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영화가 있다. 〈우렁이 소동〉은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에서 제작한 영화이다. 영화라고 하기에는 길이가 짧은 교양물로 ‘이런 현상을 없애시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하였다. 러닝 타임은 16분이고, 주제는 새로운 친환경 유기 농법인 우렁이 농법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실제에서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본보기 협동농장의 하나인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에서 후원하였다.



우렁이 농법을 하려면 우렁이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우렁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협동농장에서는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우렁이 농법을 받아들여 올해 농사도 풍년으로 안아오자고 결의한다.

협동농장의 5분조장은 우렁이 유기농법을 잘 이용해서 풍년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농업기술원이 와서 5분조원들을 대상으로 우렁이 농법에 대한 학습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렁이 농법 학습을 하려던 5분조장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5분조에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분조의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지붕에 엮을 기와를 구하지 못하였다. 아, 그런데 마침 분조원 옥분 아주머니가 동생에게서 기와를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동생이 기와가 있으니, ‘빨리 와서 실어 가라’고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5분조장은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

야 할지 몰랐다. 바로 트랙터를 준비했다. 그리고는 농장에서 키운 채소를 가득 실었다. 그리고 옥분 아주머니를 태우고, 동생이 있는 기와공장으로 가려고 하였다. 옥분 아주머니도 분조에서 어려워 하던 문제를 풀게 되어서 신이 났다. 그런데, 아차! 오늘은 오후에 ‘우렁이 농법 기술학습’이 예정되어 있었다. 옥분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지난 학습에도 빠졌다고 분조원들도 한마디 하였다. 옥분 아주머니가 분조장에게 물었다. “괜찮을까요?” 분조장은 옥분 아주머니에게 시원하게 대답하였다. “아, 아주머니 별 걱정을 다하십시오. 내가 글썽 우렁이를 모르겠습니까. 아, 기술학습 몇 번 빠졌다고 무슨 변이 나겠습니까. 내가 개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우렁이 기술학습에서 빠지고 기와를 실으러 가게 되었다.

한편 기술학습에서는 우렁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 교육이 있었다. 낮과 밤으로 기온 차이가 큰 경우에는 밤에는 물고를 잘 막아서 수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5분조장과 옥분 아주머니를 제외한 다른 농장





원들은 기술학습에서 우렁이 유기농법을 제대로 배워서 우렁이를 눈에 풀어 놓는다. 우렁이가 있으면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5분조에서도 눈에 우렁이를 풀어 넣었다. 눈에 들어간 우렁이들은 이리 저리로 잘 돌아다니면서 잡초며 해충들을 먹어 치웠다. 이맘때가 되면 김매기로 일손이 바빴는데, 한 시름 덜게 되었다.

저녁이 지나 밤이 되었다. 분조장은 우렁이들이 밤에도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논으로 나가서 우렁이들을 살펴보았다. 아, 그런데 우렁이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렁이들의 움직임이 굵든 것을 보고는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물고기들도 산소가 부족하면 움직임이 굵겨지고 수면 위로 아가미를 내고 뻐끔거렸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논둑을 열어 두었다.

우렁이에게 생긴 문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5분조장은 분조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작업 지시를 하였다. 예년 같으면 지금 한참 김매기를 해야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우렁이 농법으로 우렁이들이 김을 매고 있으니 노동력도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 가져온 기와로 분조 창고의 지붕도 엮고, 분조 딸기밭도 넓힐 수 있었다.

그렇게 분조원들에게 일거리를 배분하였다. 옥분 아주머니에게는 우렁이들의 눈을 잘 살펴보라고 하였다. “우렁이들이 풀을 잘 뜯어 먹고 있는가, 이 판에서 저판으로 자유주의를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분조원인 향미가 걱정을 하였다. “옥분 아주머니는 어제 우렁이 기술 학습에 빠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옥분 아주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다. “어제 분조장에게 개별 학습을 하지 않았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작업을 나누고 각자 일하러 나섰다. 논으로 가서 우렁이를 살펴보던 옥분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다. 우렁이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움직임이 없었다. ‘분명 어제까지 잘 기어 다녔는데, 왜 이러는 거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논 저 논을 살펴 보는데, 5분조의 논판에 있는 우렁이들은 한결 같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옥분 아주머니는 우렁이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다. 놀란 옥분아주머니는 5분조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렁이들이 몽땅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이 꼼짝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전화를 받은 분조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논판에 있는 우렁이들은 옥분 아주머니 말처럼 꼼짝도 않는 것이었다. ‘분조장도 우렁이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조장은 옥분 아주머니가 우렁이를 잘못 관리했다면서, ‘단단히 책을 지라, 단단히 변상하라’고 다그쳤다. 옥분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어요, 책임 지겠습니다’라면서, 우렁이들을 바구니에 담았다. ‘이왕 죽은 거 돼지에게나 먹이고, 변상하겠다고 하였다. 분조장은 분조장대로 마음이 급했다. 김매기를 우렁이들이 해야 하는데, 우렁이들이 모두 죽었으니 당장 김매기가 급했다. 지붕 수리며, 딸기밭 넓히기에 나섰던 농장원들을 모두 불러서 김매기를 서둘렀다.

진짜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한편 우렁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술지도원이 달려왔다. 기술원은 우렁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기술 학습 시간에 기술지도원이 우렁이는 기온에 민감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요즘 같이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클 때는 밤에 수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논물을 막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학습에 빠지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



아서 생긴 일이었다. 기술지도원과 옥분 아주머니가 다시 터놓았던 물꼬를 막았다. 물꼬를 막고, 낮이 되면서 기온이 따뜻해졌다. 수온도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던 우렁이들도 조금씩 움틀 거리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5분조장도 우렁이 농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조장은 말로만 ‘과학 농법이요, 선진농법이요’ 하면서, 과학 기술을 실효성 있게 배우지 않다 보니 소동을 일으켰다고 반성한다. 반장은 올바른 우렁이 유기농법으로 풍년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룬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제27대 북한연구회회장을 맡았다. 북한사회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국내 최고의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경기도 파주 평화기행 첫 번째 이야기

글 · 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1



필자가 1980년 초 파주 통일로를 방문했을 때 일직선으로 쭉 뻗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당시 시골길에 4차선 도로가 드물던 시절이었고, 고양, 파주는 상당 부분이 민통선 지역인 관계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았다. 그런데도 7·4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1972년에 1번 국도 구파발-고양-파주 구간을 확장하여 통일로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탄탄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과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도 많지만, 당시는 파주, 문산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한산하면서도 유일한 길이

였다. 1990년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자유로 일대의 많은 지역이 민통선에서 해제되었다. 대부분이 민통선 지역인 한강과 임진강 하류 구간을 따라 왕복 10차선 자유로를 만들었다. 이 자유로는 파주 통일대교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길이 46.6km를 1990년 10월 착공하여 1994년 9월 완공한 77번 국도이며, 10차선 너비로 계획했으나 일부 구간은 4~6차선만 개통하였다. 나머지 차선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교통 상황에 따라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사실 분단의 현장은 자유로의 시작점인 가양대교를 지나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에서부터 시작된다. 행

주대교부터 한강 변을 자세히 보면 자유로를 따라 한강을 출입할 수 없는 철책선이 임진각까지 이어진다. 이 철책선은 넘어오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포 전류리 지역의 어선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 한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트 등은 구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도로를 통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그냥 스치듯이 빠르게 지나갈 뿐이다. 내국인에게 이처럼 설명하면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분단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감각이 무뎠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가 만들어질 무렵의 국내외 상황은 냉전이 해체되는 시기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였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1991년 9월에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였다. 그간 서울-개성을 갈 수 있는 도로는 1번 국도인 통일로가 유일했는데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생긴 자유로로 파주와 개성공단으로 물류수송이 가능하였고, 1년에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행의 주도로가 되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은 조선시대에는 의주로가 있었고 지금은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철도가 있다.

오두산 전망대에서 만나는 북한

마포대교에서 자유로를 따라 차량으로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1992년 자유로 1차 개통과 함께 건립된 오두산통일전망대가 나온다. 북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원해서 흘러온 한강과 임진강이 파



2

①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임한리 마을
② 만우리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와 겨울철새

이 오두산통일전망대 앞이다. 지금은 배 한 척 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세곡선과 상선이 이 앞을 지나갔다. 전망대는 매년 100만 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2천만 관람객을 돌파하기도 했다. 4층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맨눈으로도 2.1km 강 건너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농사짓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망원경을 사용할 경우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강 건너편은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리에 해당하며 지명의 유래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강 건너 관산반도에는 임한리를 비롯하여 17개 마을, 4천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기계농과 손으로 추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2021년 북한에 큰물 피해가 났을 때 3개월 만에 30여 채의 살림집이 생겼는데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그렇듯 관산반도 일대는 산에 나무가 드



3



4



5

물어 한눈에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쉽게 구별이 된다. 인근 파주 프로방스는 빛의 도시로 밤에 이 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야성을 이루지만 강 건너 관산반도는 칠혹 같은 어둠이 깃들어 있다. 인근 가볼 만한 곳으로 파주 프로방스와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다. 성동IC를 지나 만우리 쪽으로 3~4km를 더 가면 불과 460m 지척에 북한 땅이 보인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경계선이 가장 짧은 지역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냉전 시절 이 지점에서 남북은 치열한 방송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좀 더 지나가면 남북한 경계선인 DMZ가 시작된다. DMZ는 휴전선(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각각 2km, 총 4km이며 동서 거리는 248km로 약 3억 평에 해당한다.

휴전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남쪽을 남방한계선이라 부르고, 2km 떨어진 북쪽을 북방한계선이라고 부른다. 남·북방한계선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만, 휴전선은 1,292개의 일련번호가 새겨진 표지판만 세워져 있다. 만우리 강 건너 편에서 0001번이 시작되고 강원도 고성군 동호리에 1,292번째 표지판이 있다. 인근 탄현면 오금리 민통선 내 논에는 겨울철에 쇠기리기 등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고 있고, 지금은 재두루미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철새 먹이주기에 관심이 있다면, 마을에 연락하면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강 건너 장단군 거곡리 파주평화농장 주변도 철새도래지로

쇠기리기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월동장소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15분 정도 더 가면 마정리에서 자유로와 통일로가 만나며 임진각이 나온다.

여전히 울려 퍼지는 '잃어버린 30년'

7·4남북공동성명 후 1972년 실향민들의 염원을 위해 임진각이 설립되었다. 바로 앞이 민통선이라 당시에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최북단에 만들었다. 지금은 국민관광지로 연간 400만 명이 다녀간다. 여기에는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 망향의 노래탑, 자유의 다리, 녹슨 증기기관차, 독개다리, 평화의 종, 평화곤돌라 등이 있다. 평화누리공원과 DMZ생태관광센터 등이 있어 통일 관련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2016년에는 1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으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겼다.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임진각 일대이고 그다음이 에버랜드이다. 임진각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분단의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망배단에서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해마다 추석 때는 단체로 경모제를 지낸다. 뒤에는 일곱 폭의 북한 명소 돌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끔 반북단체들이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주민,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킨다.

③ 총탄자국이 선명한 임진각 증기기관차

④ 임진각에서 바라본 경의선과 망배단. 뒤쪽에 북한 군장산이 선명하게 보인다.

⑤ 임진각 독개다리. 한국전쟁 때 총탄자국이 선명하다.

망배단 뒤쪽에는 1953년 건설된 자유의 다리가 있다. 자유의 다리 앞에는 영화 JSA에 나오는 주인공 공 이병헌, 이영애, 송광호의 마스크트가 있는데 인민군으로 나오는 송광호 마스크트는 누군가에 의해 치워져 버렸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포로 1만여 명이 이곳으로 넘어왔다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옆에는 녹슨 증기기관차가 전쟁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이 열차를 마지막 운행했던 기관사 고 한준기 옹에 따르면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1950년 12월 31일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도중 중국군의 개입으로 황해도 평산군 한포역에서 후진하여 장단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의 집중사격으로 증기기관차는 순식간에 벌집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후퇴하던 연합군이 북한군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열차를 파괴하였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무장지대 안 옛 장단역에 60년 동안 녹슨 채 방치되어 있다가 보존 처리 후 화통에서 자라던 뽕나무와 함께 2009년 임진각으로 옮겨졌다. 1천여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고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 78호이다. 1983년 정전 30주년이 되어 KBS는 여의도광장에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하였다. 당시 2시간 정도 생방송 예정이었으나 폭발적인 관심으로 9시간으로 연장되었고 6개월간

매일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보도하였다. 이때 상봉한 이산가족은 1만 여명이었다. 이때 급조해서 만든 노래가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산가족찾기 행사의 주제곡이 되었다. 덕분에 이 노래와 설운도는 인기도 함께 올라갔다. 이때의 각종 자료가 유네스코의 근대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다. 망향의 노래비에 가면 지금도 이 노래를 지겹도록 들을 수 있다. 경의선 철도교각을 독개다리라고 부른다. 상하행선 교각은 전쟁 중에 파괴되었고 상행선은 복원되었다. 파괴된 하행선 교각을 단장하여 총탄자국 등을 보존하여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최근 개통한 평화곤돌라는 임진강 민통선 구간을 연결하여 좀 더 북쪽을 조망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려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면 된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거쳐 울곡습지공원까지 민통선 안 구간 9.1km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군인들이 순찰로로 이용하던 철책 길을 임진강을 따라 걷는 생태탐방은 매일 오전 1회 출발하며 민통선구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홈페이지나 경기관광공사(070-4238-0114)에 신청해야 한다. 생태탐방로에서는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독수리, 쇠기리기를 봄, 가을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다. 단체행사를 위해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경기관광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

※ 바로잡음 : 120호 평화기행© 중 대룡이발관을 교동이발관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 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다.

한중 양국 신시대의 개막과 신 교류시스템의 모색

한중관계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중 양국 신시대의 개막과 신 교류시스템의 모색』
김승일 저 / 경지출판사(2022. 8)

수천 년 간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중국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도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점차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중갈등,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악화 등이 겹치며 한중 양국관계의 균열과 그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화, 사회, 경제 등 교류사를 연구해 온 김승일 동아시아미래연구원장의 새로운 저서가 발간되어 주목된다.

김 원장의 책 『한중 양국 신시대의 개막과 신 교류시스템의 모색』은 과거 동아시아의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한중 양국이 미래의 협력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교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역사적으로 진행해온 양국의 교류관계를 재조명하여, 향후 양국이 세계 인류의 화해(和諧)와 공생(共生)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서양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가 발전해 왔다는 발전주의가 주도해 왔는데, 이러한 시각은 19세기 이래 서양에서 사회과학이 발전하는데 편승하여 서양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파악하면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런 와중에서 아시아가 배제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시각은 이제 반드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 지적한다. 아울러 세계시스템을 재검토할 때는 두 가지 측면, 즉 각



종 역사발전 단계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과,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시스템의 파탄(동유럽, 구소련) 내지 변화(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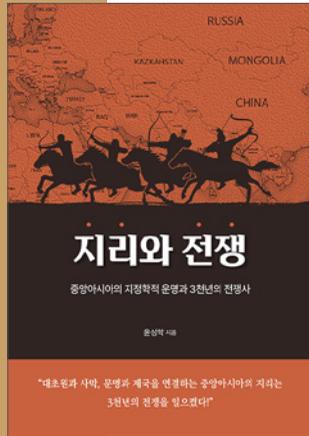
저자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구적 요소가 어떤 형태로써 비서구적인 중화문화권의 전통 요소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국제관계 시스템을 정립하려면, 집단 혹은 집단에 소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각기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즉 서로의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표본이 고대 중화문화권의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저자는 고대 중화문화권 내에서 진행되었던 교류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아야 하고, 그 운용 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특히 중화문화권 안에서도 한중 양국의 교류 네트워크가 가장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역사 이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익히 알며 가장 협력적이었던 한중 양국 관계는 때놓으려 해도 때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다만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두 나라는 모두 자신들만이 우수하다는 중화의식에 젖어 세계적인 변화를 도외시한 나머지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러한 참혹한 시대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온 두 나라의 교류가 약 60여 년(1931년 만주사변~1992년 한중수교) 간 공백상태를 가져야만 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인정한 것처럼 한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의 모델이 되었고,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양국 간의 높은 의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하에서 양국의 협력과 타협 등 팬데믹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양국 간의 인적·물적 면에서의 활발한 교류모습과 성과는 양국 사이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우호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저자는 인간의 인생역정처럼 국가도 수많은 굴곡과 역경을 거치면서 발전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어려울 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협력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중 신시대에 걸 맞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과제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 도래해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중 양국만의 문제를 넘어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공동 발전 및 평화와 안정 등이 근대 이후 지금까지 행해져 온 구미적 국제협력 시스템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 공감되고 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통적인 중화문화권의 유기적 교류시스템이 바탕이 되어 신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교류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과거의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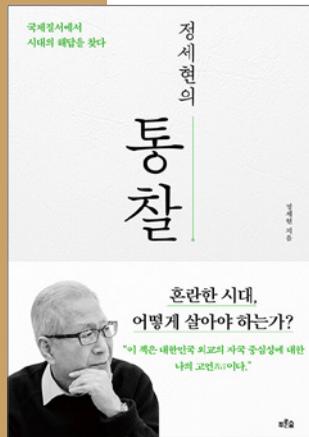
윤성학 | K북스 | 2023. 2

지리와 전쟁 -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운명과 3천년의 전쟁사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리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책은 중앙아시아 역사 3천년에 걸친 전쟁사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동서의 경계지대에 놓인 중앙아시아는 전형적인 강대국 간의 힘의 중립지대이자 완충지대였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은 이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거나 아니면 최소한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역사는 그대로 전쟁사가 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남방에서 올라온 페르시아계 주민과 북방에서 내려온 튀르크계 주민이 어울려 살아왔던 초원과 사막의 공간이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는 이란의 북부 호라산, 고대 문명이 꽃피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 그리고 중국의 신장 지역을 포함한다. 18세기에 신장 지역이 청나라에 병합되면서 톈산산맥을 기준으로 중국 쪽을 '동튀르키스탄'이라고 부르고 그때까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던 서부를 '서튀르키스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91년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튀르크에서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즈, 타지크, 투르크멘 등 새로운 민족국가를 만들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는 제국의 요람이었다. 제국의 형성은 전쟁 과정이다. 한반도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지대로 20세기까지도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열강의 전쟁터였다. 중앙아시아 또한 열강의 경쟁 무대였지만 그 자체에서 엄청난 제국도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강성한 세력이 일어나면 지리는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지리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어떤 지역의 불안정성과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책은 보여주고 있다.

정세현의 통찰 -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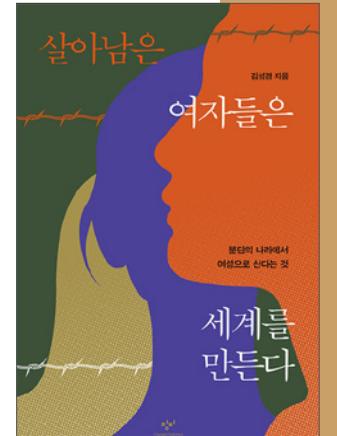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몸담아 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새책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외교 문제와 평행선으로 두고 국내외 정세를 고민해 왔다. 오랜 시간 이러한 고민을 해온 저자가 고안한 개념이 바로 '자국 중심성'이다. 외교든 통일문제든 결국 자국 중심성이 있어야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이번 책은 오랫동안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민하게 읽어온 저자의 외교적 혜안을 바로 이 '자국 중심성'이란 시선으로 풀어낸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북핵 문제 해결법을 다룬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들어선 나라들이 오랫동안 일방적인 국제관계만을 맺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립한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제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제관계 중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되짚는다. 이는,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 결심"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책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긴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19세기 국제질서가 격동했듯이, 본격적인 G2시대가 시작된 21세기 이후 국제질서는 다시 격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 푸른숲 | 2023. 2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남북이 분단된 지 어느덧 78년이 되었다. 분단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생을 다할 때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 깊게 드리워져 있던 북에 대한 적대감보다 북에 대한 거리감이 훨씬 더 압도적인 감정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이북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분단의 문제를 탐구해온 저자는 북에 대한 무관심은 남한사회의 역사적 중층성에 대한 무지로 이어진다고 그들이 사실은 우리의 거울상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산문, 소설, 편지 등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북조선 여성들의 역동적인 삶을 복원해낸다. 사회과학적 연구와 통찰에 기반한 상상력을 덧입혀 소개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서사는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파고 속에서 한 여성의 삶이 어떠한 궤적을 그렸는지 추적하는 곡진한 기록이다. 여성 한명 한명의 삶은 분단체제가 압도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국경을 초월해 작동하는 기부장제의 민낯을 파헤친다. 한편으로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극복하는 여성들의 실천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김성경 | 창비 | 20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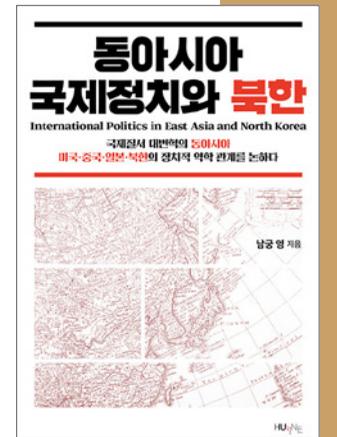


Book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 -

국제질서 대변혁의 동아시아, 미국·중국·일본·북한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논하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로, 대서양에서는 전통적 동맹인 나토(NATO)와 합동전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중 충돌의 양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 간의 경쟁에서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진영 간 대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간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전반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강대국 정치의 체스판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미중의 패권경쟁 심화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가장 핵심지역(hot region)인 동아시아의 대변혁과 미국·중국·일본 그리고 북한의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는 민화협 정책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민간통일운동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남궁영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 | 2023. 1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0호의 정답은 '하얼빈'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편집인 칼럼

편집인의 “새해에는 남북이 맨 얼굴로 보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솔직한 대화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 아닌, 또 민족문제를 남과 북 모두의 문제라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현장 통일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은 남북화해 속에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남북의 민족화해가 2023년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 **박재욱** 서울 도봉구



권두 인터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맡은 권영세 장관 인터뷰를 유의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만드는 지속가능하고 초당적인 통일정책 기반 수립과 선제적·포괄적 평화 구축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또 남북민생협력을 강조하던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화협이 통일을 향한 국민 마음을 모아주는 동반자가 되어주길 희망하는 바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통일부와 민화협이라는 민관이 협력하여 통일의 물꼬를 터어주길 바랍니다. + **송원춘** 부산 진구



신년대담

2023년 남북 관계 전문가들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냉철한 태도로 남북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지부진하고 복잡다단한 한반도 정세이지만 차분히 고차방정식을 풀어간다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완화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김지일** 경기 평택시



돌아보기②

얼마 전 세계인의 축구 대제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났습니다. 월드컵은 개최국가의 관광, 대외무역, 일자리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월드컵을 포함한 스포츠는 남북 분단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어렵겠지만 오는 2030년 남북 공동 월드컵 유치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의 마중물이 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김은경** 대구 달서구



우표로 보는 남과 북

새해가 될 때면 연화장을 챙겨 보내곤 했는데, 이러한 풍습의 유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1953년 북측이 먼저 연화엽서를 발행하고, 1957년에는 남측이 발행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남과 북 모두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연화엽서를 발행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 **김태영** 경기 시흥시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광복78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진행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후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3년 2월 22일(수) ~ 3월 21일(화)

※ 장학생 선발명단 5월 초 공지



ENG

모집대상

-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총50명

신청자격

-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일 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등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포함
-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이 없을 경우 독립운동 관련 증빙자료(기사, 서적 등)제출 가능
-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 (증·고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발 고려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2023년 1·2학기 모두 등록예정인 재학생(신입생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민화협 홈페이지 '알림마당' 확인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1인당 총 600만원(1학기/2학기 분할지급)
- 2023년 5월과 10월 지급예정
※ 매 학기 재학증명서 확인 후 지급
※ 2023년도 휴학 또는 졸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증서수여식 필수 참석(5/12 예정)
※ 해외체류학생은 온라인 접속 필수
- 여름 방학 중 1박 2일 장학생 역사캠프 필수 참석(8/11~12 예정)
※ 불참시 장학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원서 제출 방법

- <https://kcrclotte.recruiter.co.kr> 통해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문의처

- 민화협 정책홍보팀(02-761-9327, kcrclotte@naver.com)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공모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남북한을 주제로 인문·사회, 경제, 문화·예술, 자연·과학 등 각 분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남북 동질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 **2023년 2월 20일(월)~3월 20일(월)**

공모 분야

- 분야 : 남북 및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민족의 화해와 남북 공동번영,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연구
- 주제 : 자유주제 (단, 정치외교, 군사·안보 분야 제외)

응모 자격

- 박사급 부문 : 박사 학위 수료자 및 취득자
※ 전공무관, 공고일 기준
※ 응모 논문 수는 제한 없으며, 공저 가능
- 석사급 부문 : 석사 학위 취득자

지원 및 시상 : 총 22편

- 연구비 지원
 - 박사급 : 1편당 700만원
 - 석사급 : 1편당 500만원
- 시상 내역 (연구비와 별도)
 - 우수논문 상장 및 상금
박사급 : 1등 500만원 / 2등 300만원 / 3등 200만원
석사급 : 1등 300만원 / 2등 200만원
 - ※ 적격자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업 일정

- 공모 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3월 20일(월)
- 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중
- 중간 발표 및 멘토링 : 2023년 6월 중
- 논문제출 : 2023년 10월 1일(일)
- 롯데학술심포지엄(최종발표) : 2023년 10월 20일(금)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방법

- 제출서류 : 민화협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www.kcrc.or.kr)
- 제출방법 : E-mail (kcrclotte@naver.com) 접수

기타 유의사항

- 연구 공모 일정 전 발표 또는 게재되었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선정에서 제외
- 연구비는 연구자 선정 후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50% 선금(4월 중), 최종논문 제출 후 적격성을 판단하여 잔금 지급
- 연구사업 선정자는 '중간 발표 및 멘토링'과 '롯데학술심포지엄(최종발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연구 최종결과물은 사업 종료 6개월 이내 국내외 학술지, 등재지에 사사표기를 반드시 명시하여 논문을 게재

문의처

- 민화협(02-761-1213, kcrclotte@naver.com)

주최  롯데장학재단

주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